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81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9월 13일 (음력 8월 4일) 목요일

‘공공기관 유치전’ 광주시-전남도 경쟁 불가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검토작업에 착수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기관 유치가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유치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와 에너지 기관 유치를 모두 노리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경쟁할지, 협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대응 TF팀을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각각 단장으로 조만간 구성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속한 전략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문화와 에너지 기관 유치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역결과를 토대로 문화 분야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이 꼽히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등이 유치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유역결과 문화와 에너지분야 여러 기관이 제시됐다면서 “TF팀

정부·민주당,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검토작업 착수

문화·에너지 기관 유치 공동 지향점...각 TF팀 구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통해 한전 유치사례 협력해야

이 가동되면 유치할 기관이 좀 더 많이 가시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에너지와 농생명, 문화예술, 해양 분야 등 4개 부문을 핵심으로 정해 공공기관 유치를 나설 예정이다.

현재 나주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어 연계 기관이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시설관리단과 별정우체국인공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농업정책보험금융

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유치대상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12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이미 추진해온 국립 섬발전연구원과 국립심해수질환경센터, 해양경찰 서부경비창 등 20개 기관 유치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중 문화와 에너지 분야가 중첩돼 있어 향후 유치 과정에서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에너지와 문화 기관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할 상

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각각 경쟁할 것인지, 협력 체제를 구축해 공동유치전략을 구사할 지 등 큰 틀의 방향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전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통해 한전 등 대규모 기관을 유치했던 것 처럼, 양 시·도가 출혈적인 경쟁보다는 대타협을 통해 상생의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롭게 부상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시·도 상생발전위원회가 가동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문화와 에너지 기관 유치가 광주시와 지향점이 같다. 각자 유치전을 할지, 공동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시·도가 만나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발미 제공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실장의 “강남 발언과 최저임금 인상률 관련 ‘술직히 저도(높아서) 살짝 높았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책 라인 수장에게서 두 시간만에 이런 언급이 없는 유례이탈식 발언이 나온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실장은 (티브이) (TBS) 라디오인 테루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 번 개각에 대해 ‘실기일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실기일전’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것은 청와대 특히 정하성 정책실장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자료사진=뉴시스

한국노총 전남지역 근로자 특별순회교육

여수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및 간부 조합원 대상 실시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는 11일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4층 교육장에서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었던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특례업종, 최저임금 등 대응

방침에 대하여 여수지역 노동조합 대표자 및 간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제1강의를 맡은 한국노사법률원 신광교

원장은 강의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휴일근로 및 특례업종 특히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광교 원장은 “노사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생산량은 저하되고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무너지면 노사 모두가 위기에 이르게 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휴일 근로의 중복지급 건은 노동부 해석과 정부의 입법례,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르고 더구나 곧 나올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노사관계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강에서 박정태 노무사는 “장시간 근로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회사발전을 저해한다”며 “노사 공히 안전한 일터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노사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노동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신원 한국노총전남본부 의장은 “3만 한국노총 전남본부 조합원과 함께 소통, 대화, 포용의 노사 관계로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우리 노동자가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도민속의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국내 최대 규모(100MW)’

영암 태양광발전소 착공

전남도는 12일 영암 금정면 소재 영암풍력발전소에서 국내 최대 규모(100MW)인 영암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전동평 영암군수, 유형열 한국남동발전사장, 서기섭 대명GEC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 시행사인 대명GEC는 현재 가동 중인 40MW(2MW×20기) 영암풍력발전소 350만4705㎡ 부지에 민간자본 1500억 원을 투자해 100MW급 태양광발전소를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한다. 100MW는 연간 4인 가족 9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사업 추진을 위해 대명GEC는 지난해 7월 산업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영향평가 등을 수립해 이만달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또 영암 대불산도의 조선업종 사업체와 170억 원 규모의 태양광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발전소가 들어서는 영암 금정면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설비(1MW)를 설치해 무상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운영되면 주민들에게 연간 2억 원, 20년 동안 40억 원의 수익이 생길 전망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서...



그러다 국방장관도 경질되는데...

시민들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노·사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도와 드립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